

# 통일준비를 위한 수산부문 대북정책 수립전략

신 영 태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 선임연구원

## 1. 남·북 수산업의 현실 진단

### ■ 남한의 수산업

- 수산물 선호 국가
  - ▶ 2012년 기준 1인당 수산물 공급량 54.9kg (어패류 29kg, 해조류 15.9kg)
  - ▶ 국민 1인당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 중 수산물이 37.3% 차지
- 강소(強小)의 산업구조
  - ▶ 생산
    - 2011년 기준 세계 16위(해조류 제외)
    - 생산량 2,254천 M/T
      - 굴, 전복, 해조류는 세계 최고 수준
      - 양식기술, 어로장비도 세계적 수준
  - ▶ 수출
    - 세계 23위, 2,173백만 불

### ● 어장의 한계성과 수급불균형 심화

- ▶ 오랫동안의 과도한 어획으로 연근해어장 생산성 하락
- ▶ 한·일 어업협정(1999)과 한·중 어업협정(2001)의 체결로 상당한 어장 상실
- ▶ 연안국 및 국제기구의 규제 강화로 원양 어업 출어에 어려움



- ▶ 국내생산량은 320만 M/T에서 정체
- ▶ 수입량은 매년 증가 추세



수산물 수급불균형 계속 심화



### ■ 북한의 수산업

- 어업기반 취약 및 전력난으로 생산 정체
  - ▶ 어장이 동서로 분리되어 협소하고 어업자 원도 적음
  - ▶ 어선 노후화, 어업 장비의 부족
  - ▶ 어업생산량
    - 1970년도까지는 남한과 비슷함

- 통일준비를 위한 수산부문 대북정책 수립전략

- 1980~1985년까지는 170만M/T 전후, 이후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
- FAO 통계상 2000년 이후 27만 M/T

-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어업자원 감소
  - ▶ 서해 5도 인근 및 동해안 중국어선 입어, 과도한 조업 → 어업 자원의 감소가 예상됨
  - ▶ 2000년 이후 북한 수산업 전 분야에 걸쳐 진출
  - ▶ 2010년의 5.24 조치 이후 서해 북한 수산물 수출의 전매권 확보
- 양식어장 여건은 양호 예상
  - ▶ 오염원 없고, 개발이 전체적으로 부진
  - ▶ 남한 부족 품목 생산 가능(냉수성 어종과 바지락 등)



## 2. 금후의 대북 수산정책 방향

### □ 기본방향

- 상호비교우위에 입각하여 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 북한 수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 우선 추진
- 걸림돌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불확실성이 매우 큼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

### □ 1단계 추진방향

- 북한 수산물 반입 재개
  - ▶ 반입금지 실익 작고, 재개 시 일부 품목 수급안정화에 기여
  - ▶ 결재방식의 다양화 (필요시 구상무역)
- 어선건조 및 어업자재생산 협력
  - ▶ 남한의 기술 및 자본과 북한의 인력 결합
  - ▶ 북한 수산업 발전 및 남한의 중소조선산업 활성화에 기여

### □ 2단계 추진방향 : 이미 합의된 사항을 추진

- 북한수역 입어
  - ▶ 1차 : 입어로 지불 조건 (중국어선을 남한어선으로 교체)
  - ▶ 2차 : 남한은 어선과 어구 제공, 북한은 어장과 선원 제공 조건
- 북한수역에서의 양식
  - ▶ 연어부화 및 방류, 배양장 건립 및 우량종묘 개발 등



- 유통 및 가공분야 협력
  - ▶ 남한에서 원료, 기자재 등 제공, 북한에서 부지, 인력 제공(개성공단 방식)
  - ▶ 생산된 가공수산물은 국내반입 또는 수출

### ■ 3단계 추진방향

- 어장 및 어업자원 공동조사
  - ▶ 어장잠재력
  - ▶ 지속가능 어업자원량
- 공동 어업관리제도 마련
  - ▶ 단일 수산법규 제정
  - ▶ 포괄적 어업관리방안 수립
    - 어업허가·면허 및 신고제도
    - 어선관리
    - 공동 조업구역 및 금어기·금어구
    - 어종별 TAC 설정

### ■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

- 정치적 이유로 인한 수산협력 중단을 최소화
  - ▶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전무했음을 상기
  - ▶ 수산업은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가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부문
- 對 북한 투자업체에 대한 지원확대
  - ▶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 조세감면 지원
  - ▶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손실 보전

## 3. 맺는 말

- 남북수산협력 또는 대북수산정책은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
  - 정치적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경제적·인도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함.
- 북한 수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대상
- 북한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필요한 정보 및 행정적 지원 강화
- 불가피한 이유로 남한의 진출업체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 정부의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㉞

## ➔ “남북 통일시 식량 650만톤 비상비축 필요”

〈2014년 6월 19일 전업농신문〉

북한에 급변사태가 와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정부 정책의 최우선 조치는 북한의 식량 문제와 농촌주민의 대량 남하에 대한 신속한 처리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사)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KAPRI)이 지난 17일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와 공동으로 농업기술진흥관 2층 대회의실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농림수산부문 대북정책 수립전략’이라는 주제로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서 나왔다.

이날 김운근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북한은 매년 450만톤 내외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 약 2천480만명의 곡물수요량 650만톤의 69%로 매년 평균 30%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급변사태 발생시 통일초기 식량의 대북 공급을 위해서는 적어도 쌀과 옥수수 등 1년치 필요량 650만톤의 비상비축이 필요하며 이 양을 금액으로 환산시 약 44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통일시 혼란 수습기간이 적어도 단기인 2~3년이 지속될 경우 그 비용은 110~165억 달러의 엄청난 국가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이며, 통일로 국제곡물가를 폭등시킬 것이며 사전 비축을 통한 우리정부의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아울러 북한 지역 식량저장시설이 크게 낙후돼 통일 이후 1년간은 남한에서 저장, 공급하되 점차 안정기에 들면 북한지역 8개도와 대도시 중심으로 임시저장 창고 시설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또 비상시 북한지역 농촌지역 인구의 대량이탈은 북 농촌 지역사회와 농업기반 유지붕괴로 농촌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며, 따라서 통일 즉시 국가소유인 협동농장을 현지 농민에게 지분권을 부여, 최대 30~50년은 경영권을 유지하게 하는 등의 현지 정착 유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외에도 북한의 농자재중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종자 공급도 최우선으로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끝으로, 통일초기 식량가격 급등으로 정부지출은 증가하나 농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종자 등 농자재회사의 풀가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농업분야 대북정책 준비 필요”

〈2014년 6월 20일 농민신문〉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1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농업기술진흥관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농림수산부문 대북정책 수립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농기협이 통일에 대비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지난해 8월 통합한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윤천영 농기협 회장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일 긴급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바로 먹거리 문제”라며 “비상시에 대비한 농림축수산부문 대북정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운근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장은 ‘통일에 대비한 농업부문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 붕괴 시 농업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협동농장 구성원들에게 농지 임대권(지분권)을 주고 영농을 통한 정착을 유지토록 하는 유인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